전남 서부권

경찰, 양귀비 단속 손 놨나

무안주택가 버젓이 재배
최근 3년간 적발단 1건

무안군 무안읍 주택가에서 마약 성분을 가진 양귀비가 불법 재배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재진이 최근 무안읍 성내리 일대 주거지를 돌며 확인한 결과 1곳에서 양귀비 67주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었다. 〈사진〉

무안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 달간 양귀비· 대마의 불법 재배 및 사용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재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닐하우스 채소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은폐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등잔 밑'인 무안 읍내에서 재배중인 양귀비는 적발하지 못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경찰은 지난 2010년 양귀비 재배 1건(31주)을 적발했을 뿐 2011년과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 건도 입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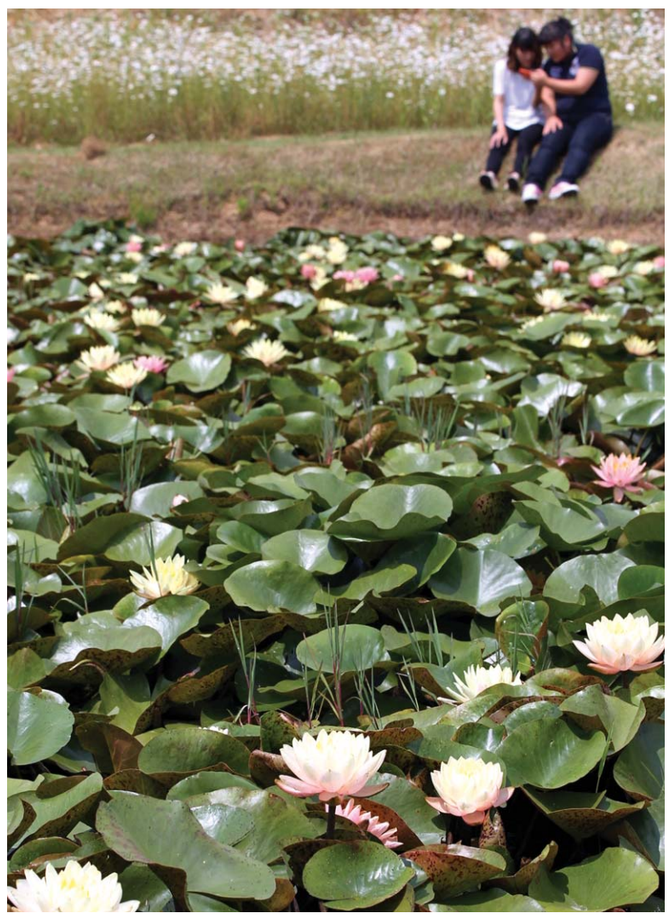
이러한 저조한 단속실적은 경찰들이 양귀비꽃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데다 실적 건수만을 의식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50주 이상을 재배해야 사법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속기간이 되면 다 뽑아 버린다"며 "주민들이 1~2주 정도는 상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단속하면 야박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경찰서나 군청 주변 3~4곳에 양귀비가 심어져 있다"며 "양귀비로 술을 담아 한 병당 5만원씩 거래되고 있다. 양귀비꽃이 개화한 지금 집중단속 시기를 놓치면 지역에서 많은 마약 중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및 대마는 정부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불법 파종·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달맞이 공원 수련 활짝 최근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 공원 내 연못에 수련이 활짝 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해살이 수중식물인 수련의 꽃말은 '청순한 마음'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목포해양대, 요트산업 육성 앞장

신기술 보유업체 유치
집적지역 조성 기공식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안영섭)는 최근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목포해양대에서 부지와 기자재 등 현물 44억원과 현금 4억 2000만원, 중소기업청 국고지원 23억원, 전남도 2억원, 목포시 4억 원 등 총 7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레저중 으뜸인 요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을 보유한 요트제작 관련 업체를 유치해 요트 생산·판매 및 수리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이다.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해 요트산업의 일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 레포츠 장비와 해양 IT(정보기술), 해양BT(바이오 기술) 등 해양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목포해양대는 교수진과 첨단 고가 장비의 활용을 통한 기업 지원의 극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집적지역 내에 종합 실습관과 산학 협력관을 건립하고, 재학생들의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영섭 총장은 "이번 사업은 해양산업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해양문화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북항 완충녹지 휴식공간 만든다

목포 북항 일부 완충녹지가 '웰빙 공간'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북항 회센터 일대 완충녹지 너비 15m·길이 678m에 잔디, 나무 등을 심어 주민의 건강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착공한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으로 뚫은 도로를 복구하면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웰빙 공간으로 만들었다.

3단계 사업은 325억원을 투입, 내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수관거 정비 19.5km, 배수설비 1072개소, 대하수도 박스를 배수펌프장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북항, 대성지구 침수예방은 물론 신안 비치아파트 뒤 유수지로 방류되는 하수도를 차단해 악취 민원 등을 말끔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6월 시작한 하수관거 1,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모두 끝났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1489억원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달 말 공사가 끝나면 북항권을 대표하는 웰빙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흑산 영산도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협약

신안군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지난 11일 흑산면 영산도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산도는 2010년 국립공원 마을지구 해제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주민들이 해제를 원치않아 국립공원에 남게 됐다.

2012년도 명품마을을 선정 평가에서 주민 참여의지와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서부사무소는 ▲섬마을 색채 디자인, 폐가 등 환경정비 ▲특산품 판매 시스템 구축 ▲육상·해상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5개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함평 주포지구 한옥마을 택지분양

26일까지 신청 접수

함평군은 오는 26일까지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 택지분양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택지분양 신청을 접수한 후 7월 중에 분양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 부지 5만9330㎡(택지 3만809㎡·공공용지 2만8521㎡)에 한옥 50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와 공용 주차장·소공원·마을회관 등을 건립하고 둘레길·녹지공간 등의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택지는 총 40 필지로 필지별로 517㎡~768㎡ 규모이다. 공급단가는 ㎡당 14만1000원으로, 분양 가격은 필지에 따라 7300여만원 ~ 1억원 내외이다.

이곳은 국도 4개 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 광주~무안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되는데다 서울에서 3시간 이내, 광주·목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전원주택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천혜의 갯벌과 서해바다의 풍광이 수려한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에 고품격 한옥 전원마을을 조성해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민박 활용 등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1- 320-3873)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전 북

학업중단 학생 줄이기 나섰다

도교육청 '숙려제'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들이 충동적이고 교육적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熟慮)제'를 실시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장기결석 등으로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에게 위(Wee) 클래스·Wee센터·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곰곰이 생각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학교장은 심리·정서적인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해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해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숙려기간 동안 출석인정으로 인한 과다한 혜택과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숙려제를 인정한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과 격려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가 이뤄진다면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도 도내 고교생의 학업중단 학생은 131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습 부진·학업 기피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91명(62.5%)에 달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 공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보존회(회장 임준호) 회원들이 전수관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500여년 전부터 순창 들녘에서 불려진 금과 들소리는 지난 2005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됐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신

내일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4강좌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제 4강좌가 14일 오후 3시 군산시청 새만금 아카데미홀(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통일교육원 김동수(정치학 박사) 교수를 초청, '통일 미래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서울대와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대사상 연구회장, 한국 정치평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통일문제 이해'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등이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지자체 평가 자활부문 1위

남원시가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자활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부합동평가는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등 3개 지표로 평가했다.

남원시는 자활공동체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위탁 지원, 자활기금 지원,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전북도 농기원, 화훼 신품종 전시회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서 화훼 신품종 전시회를 갖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시회는 도 농업기술원이 육종한 신품종 나리(백합)·장미·국화·안개꽃·스타티스와 이를 이용한 꽃꽂이 작품 등 225여점을 선보인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을 그동안 ▲나리 12품종 ▲국화 13품종 ▲안개꽃 9품종 ▲스타티스 9품종 ▲원추리 7품종 등 50여 품종의 신품종을 개발 출원· 등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부안군, 1기분 자동차세 13억 부과

부안군은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6354건 13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 다음달에 수시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및 사용가능 카드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 경제구역청-日 노무라연구소

'첨단 물류단지조성 용역' 체결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대행 이현웅)은 지난 11일 경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적인 경제연구소인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서울지점장 최창희)와 '새만금산업단지 국제 첨단 부품소재 제조물류 단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청은 지식경제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외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용역사업에 '국제 부품소재 제조 물류단지 조성'이라는 용역 과제를 제출해 선정됐다.

이어 경제청이 용역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 결과 노무라 종합 연구소를 포함, 6개사가 지원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노무라 종합연구소를 선정한 바 있다.

'국제 첨단부품 소재 제조물류 시범단지' 조성 용역은 자동차·기계업종을 중심으로 일본 또는 서구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였을 때 어떤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FTA 환경과 국제 물류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제시하고 ▲중점 유치대상 부품소재 선정 및 육성방안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국내외 관련기업 투자유치 방안 등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도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탄력

'종자법' 시행따라 행·재정적 지원 길 열려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김제시에 들어서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Seed Valley)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1일 '종자산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전북도가 유치한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행·재정적으로 확고한 지원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김제시 백구면 옛 전북도 축산시험장 부지 10만㎡에 들어서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오는 2015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해 관련업체 20개 입주와 고급 육종인력 270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종자수출의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종전의 '종자 산업법'은 대부분이 식물 신품종 권리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데다 종자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국한돼 정부가 추진하는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법'과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한 '식물 신품종 보호법'으로 분리했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의 주요 사항은 중소 종자업체, 종자산업 진흥센터 지정, 종자기술 연구단지 조성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자산업 진흥센터는 첨단 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관리, 수출 지원 등 민간육종 연구단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도의 요구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비 규모를 확대(10ha·270억원→54.2ha·750억원) 하는 게 타당한 지를 재조사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단지조성에 큰 힘이 된다"며 "내년에 기반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국가예산 130억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